

선거명	제22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녹색정의당		
정책번호 1	<기후> 탄소중립경제로 전환, 22대 국회 제1과제로	분야	산업자원, 건설교통, 환경, 재정경제
<p>○ 목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후위기 대응 국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, 탄소중립경제와 정의로운 전환 실현 - '1만 원 기후패스'로 시작하는 2030년 무상교통 <p>○ 이행방법</p> <p><탄소중립경제와 정의로운 전환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기후위기 국가 최우선 과제 수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행정부처에 기후위기 대응 총괄 지휘하는 기후경제부 신설 -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을 가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□ 기후위기 대응 재원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탄소세 부과하여 탄소배출 감소, 기후배당으로 저소득층 불평등 해소 - 국토와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각종 지역 개발 중단 - 소형모듈원전(SMR) 사업과 공항 항만 등 좌초 인프라 예산 기후대응기금으로 전환 - 교통시설특별회계(교특회계) 도로 건설 비중 대폭 축소로 도로변 태양광 사업으로 전환 □ 재생에너지 2030년 50%, 2050년 100% 추진, 탄소중립경제 실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탄소중립산업전환지원법 제정,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산업 촉진 - 산업은행을 녹색투자은행으로 전환, 녹색 금융 지원 및 활성화 특별법 제정 -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에 대비한 국가 전략 수립과 대응 체계 구축 -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, 신규 건설 중단 □ 기후위기 대응 지역공동체와 지역일자리 100만 개 조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유지에 재생에너지 확대 법제화, 1가구 1태양광 설치 지원하는 녹색일자리 - 집수리, 단열 등 에너지 효율 그린 리모델링 100만 호 지원 녹색일자리 - 공공교통·녹색교통 활성화로 녹색일자리 조성 □ 녹색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여 기후재난에 취약한 주거지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건물에너지 효율 등급제 도입 - 난방 연료 탈탄소화 로드맵을 구상 - 폭우와 장마 대비 반지하, 폭염과 한파 대비 옥탑방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			

□ **노동자, 농어민,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정의로운 전환 이행**

- 국가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출범
- 중앙, 지역별 주민참여 탈석탄준비위원회 구성, 탈석탄지역지원 특별법 제정
- 친환경 농어업을 위한 기후생태직불제로 전면 개편, 기후재난 대응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
- 내연 자동차 연관산업(주유소, 자동차정비 등) 지원, 지역 기후재난 인프라 구축, 예산 투입

< 1만원 기후패스로 시작하는 2030년 무상교통 >

□ **2030년 무상교통으로 가는 '1만 원 기후패스' 도입**

- 수송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30년 무상교통 국가계획 수립
- 노인, 청소년, 장애인, 소규모 지자체 무상교통 우선 도입 및 월 '1만 원 기후패스'

□ **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기본법 제정**

- 교통기본법 제정. 교통약자 등 보편적 이동권 보장, 공공교통 수송분담률 목표 및 이행 의무화 조항(2030년까지 30%에서 60%로 2배 확대), 자가용 수송분담률 감축 목표 조항(2030년까지 현재의 50% 감축) 명시
- 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, 노동자 등이 참여하여 민주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숙의형 통합 교통 행정기구(가칭 시민교통정책위원회)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확대·개편

□ **온실가스 '배출 제로', 안전한 '비전 제로'**

- 대자보(대중교통, 자전거, 보행) 교통 체계 중심의 도시기본계획 편성
- 신규 공항 건설 금지 및 이용률 하위권 공항 통폐합 추진, 태양광 발전 및 숲 부지 조성
- 광역 철도를 확대하고 철도-지역 공영버스 연계로 광역-지역 교통 인프라 구축
- 신규버스 100% 전기버스, 2030년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중단, 영업용 화물차 전기차 전환 지원

□ **버스·지하철 통합형 대중교통 완전공영제 추진**

- 버스 노선 운영을 통한 사기업의 약탈적 운영 방지,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개선

□ **"자전거면 충분하다" 자전거 생태교통 활성화**

- 탄소중립 기본계획 등에 자전거 정책 포함, 자전거기본법 수송분담률 목표 10% 명시
- 정부 내 자전거 전담 총괄부서를 통해 자전거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·추진
- 자전거 전용도로·태양광 발전 연계 '태양광 자전거 도로' 대폭 확대
- 자전거 주차장을 공공교통과 환승이 편한 거점 터미널로 확대하는 등 인프라 개선

□ **사회연대 재정원칙과 기업교통세로 재정 마련**

- 고용 규모에 따라 기업에 부과하는 기업교통세 신설, 전부를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전입
-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 공공교통 확충에 투입(도로, 공항, 항만 계정 비율 30%로)

○ **이행기간** : 22대 국회 임기 내

○ **재원조달방안** 등 : 법·제도 개선, 일반회계 등으로 조달

선거명	제22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녹색정의당		
정책번호 2	<저출생> 주거, 교육, 돌봄, 시간 불평등 극복으로 저출생 해결	분야	보건복지, 교육, 여성, 노동
<p>○ 목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저출생 5대 요인인 ‘고용불안, 주거부담, 출산 및 육아부담, 교육경쟁 심화, 일·생활 조화 어려움’ 해소에 중점을 두고 삶의 질 개선 <p>○ 이행방법</p> <p><저출산 5대 핵심 정책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10년+10년 집 걱정 해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함께 살면 10년, 아이가 태어나면 10살이 될 때까지 공공주택과 주거지원비 제공 - 대상: 혼인 및 동거 이후 10년 이내 가구, 만10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- 기간: 아동이 없는 경우 입주 후 10년까지, 아동이 있는 경우 만10세까지 - 지원: 공공임대주택 제공(신도시 재건축시 공공주택비율 20% 의무,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적용) 및 주거지원비(월 60만원) - 3자녀가구 무상주택: 중위소득 140% 이하 가구 중 3자녀 가구에게 무상매입임대주택 제공 □ 임신·출생 사회책임제로 무상 임신·출생 실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신,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전액 지원, 원스톱 상담창구 및 지원체계 마련 - 청소년, 미혼부모, 외국인, 노숙인, 장애인 등 취약계층 특화서비스 마련 - 공공병원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설치, 재가 산후조리 시 출산가정 전문간호사 방문 □ 눈치 안보고 사용가능한 육아휴직, 성평등 돌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동육아휴직제 도입, 아빠 육아휴직 3개월 할당,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 분할 사용 - 출산전후휴가, 배우자 출산휴가제 확대, 육아휴직 급여 상한제 인상, 사후지급금 폐지 - 중소기업 등 대체인력 지원 위한 <대체인력지원센터> 설립·운영, ‘대체인력’ 소득 보장 □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생활 조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4일제 도입과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로 몰아쓰기 노동 없는 온전한 주4일제 실시 - 근로시간단축 청구제 사유기간 폐지, 전일제 복귀 청구권 부여. 연간 30일 유급 돌봄휴직으로 일과돌봄시간자유선택제 도입 - 연차휴가 5일 추가, 1년 중 최소 1개월 휴가 부가. 연차휴가 발생기준 6개월로 축소 			

□ 사교육비 경감

- 국가책임 돌봄과 제대로 된 유보통합으로 돌봄 부담 경감
- 대학 상향평준화 및 학벌 차별금지법으로 입시경쟁 완화
- 한반 20명과 중층 기본학력 보장 시스템으로 맞춤교육

<안심 보육, 아동 기본권 보장>

- 18세까지 아동수당, 어린이·청소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, 아동치과주치의제 실시
-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50%, 보육교사 확대와 처우개선, 아동전문상담가가 찾아가는 ‘금쪽이 보육’ 실시, 아동학대 전담인력 확대 및 처우개선
- 아이돌봄 3종 세트 - 키움센터, 아이돌보미, 장난감 도서관 확대
- 대규모 양육시설 일몰 선언, 해외입양 일몰 선언, 지역사회 아동보호인프라 확대
- 다문화, 외국인아동, 가족 돌보는 아동 지원 강화, 기후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보장
- 아동기본법 제정, 아동·가족예산 2배 확대

<국가책임 돌봄, 대학평준화로 사교육비 경감>

□ 맞춤형 미래교육 / 아동돌봄 국가책임

- 초1부터 한반 20명, 수업 바꾸는 교육과정-수업-평가 혁신, 서울대 10개 및 지방 강소대학 육성 등 대학 상향평준화, 지방대부터 무상
- 제대로 된 유보통합 및 영유아학교, 국공립유치원 확충,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, 국가책임 돌봄 시스템, 돌봄전담사 확충 및 노동권 보장

□ 입시 사교육비 경감 / 모두의 배움 책임지는 학교

- 학력학벌 차별금지법, 대학 상향평준화, 대입 절대평가, 사교육 선행학습 조치
- 핀란드식 중층 기본학력 보장 시스템, 학생 맞춤지원 확대, 코로나 결손 지원, 생태교육 등 미래 녹색교육,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또는 추첨제

□ 노동 주도 직업교육 / 교육재정 확충

- 노조 참여 산업별 직업교육위원회, 정부부터 고졸채용,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확대, 특성화 고와 마이스터고 격차 해소, 전문대 일반재정지원 확대
-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, 고른 대학지원, 총액인건비제 개선

□ 학교구성원 권리 증진 / 서민 위한 평생교육

- 학생인권법 마련, 교원 교육활동 보호, 학교 행정직원 충원, 학부모회 법제화, 교육공무직 법적 투명인간 해소, 성과급제 폐지, 노동인권교육 활성화
- 평생교육 바우처 확대, 시민학습공동체 지원, 지역 밀착 고등평생직업교육

○ 이행기간 : 22대 국회 임기 내 실현

○ 재원조달방안 등 : 일반회계, 특별회계,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조달

선거명	제22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녹색정의당		
정책번호 3	<돌봄> 돌봄복지국가 -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통합돌봄	분야	보건복지, 문화관광, 농림해양수산
<p>○ 목 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생애 통합돌봄으로 전국민 모두가 존엄한 삶 보장 <p>○ 이행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전생애 통합돌봄으로 전국민 존엄한 삶 보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GDP 대신 ‘국민 삶의 질 지표’ 예산 편성 의무화 - 돌봄부총리제 도입으로 중장기 돌봄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, 예산편성권 보장 - 돌봄이 필요한 모든 주민에게 돌봄 기본권 전면 보장 - 시도 시군구까지 사회서비스원 확대. 요양, 돌봄, 보건의료, 주거 등 종합지원체계 마련 - 어르신, 장애인, 정신장애인, 노숙인 등 특화 지원 맞춤형 체계 구축 - 시군구마다 돌봄플래너 도입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- 읍면동마다 ‘공공돌봄센터’ 설치. 24시간 돌봄, 긴급돌봄, 요양, 방문간호, 방문재활 등 통합 제공, 서비스 종사자는 센터가 직접 고용 - 아동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상담서비스 제공. 시군구마다 마음건강상담센터 설치 - 전국민 보편적 상병수당 도입으로 아파도 쉴 권리 보장 □ 건강하고 존중받는 노후 보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노인최저소득보장제(보충급여, 월 최대 30만원)로 후기고령층의 노인빈곤(54%, 22년) 해소 - 노인맞춤형 사회적경제 지원, 정년 연장, 다양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 - 편의시설과 의료·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실버아파트, 원룸형 실버주택 확대 - 국공립 장기요양 30% 확대, 방문재활급여 등 급여 다양화, 장기요양보호사 종합대책 마련 - 시군구마다 공공병원 착한 장례식장 운영, 장례서비스 표준비용 발표로 반값 장례비 실현 			

□ 지역, 필수, 공공의료 강화로 지역소멸 방지, 건강도시 실현

- 지역인재 60% 선발,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 공공의대 설치
- 70개 중진료권마다 500병상 이상의 현대식 공공병원 설립
- 100병상 규모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으로 국가표준 선도, 국립대 의대 증원
- 전국민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실시. 건강보험 보장률 80% 확대, 혼합진료 금지 및 적정수가로 비급여 해소
- 상급종합병원, 공공병원,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, 전문병원, 재활병원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실시로 보호자없는 병원 실현
- 모든 병원 산재보험 당연지정제,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청구권 대행 등 전국민 산재보험
- 나와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
- 지역 격차 없는 건강복지도시 실현.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대 강화

□ 예술노동의 권리 보장, 지역마다 '문화마을'

- 예술인 산재보험 전면 적용,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
- 동의 없는 창작품 인공지능(AI) 학습 금지, 창작자의 저작권 강화
- OTT 콘텐츠쿼터제 도입, 콘텐츠 발전기금 징수
-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, 표현의 자유 보장
- 기초자치단체마다 문화재생 통한 기반시설, 예술인 창작공간, 예술인 공공 임대주택 조성
- 완전도서정가제 시행, 동네서점·도서관 지원 확대, 사서 인력확충 및 처우개선

○ 이행기간

- 22대 임기 내 실현

○ 자원조달방안 등

- 법 제도 개선사항, 일반회계, 사회보장기금 등으로 조달

선거명	제22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녹색정의당		
정책번호 4	<노동> 노동시간 불평등 해소, 일하는 시민들을 지키는 노동 중심 사회	분야	노동
<p>○ 목 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노동시장 격차해소, 플랫폼 및 초단시간 N잡러 소득보장 - 노동시간 획기적 단축, 돌봄시간 보장, 노동자 고용보장과 정의로운 전환 <p>○ 이행방법</p> <p>□ 노동시장 격차해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임금격차해소위원회 설립, 22대 국회 내 공공기관부터 임금격차 30%이내로 해소. 저불격차 해소를 위해 적정납품단가 개선, 공정거래법 개정 - 동일가치노동-동일임금 명문화 및 근로기준법 6조의 차별처우 금지 대상 및 비교대상집단 업종 내 유사동종의 업무까지 확대 - 노조법 2,3조 개정 재추진을 통해 하청 및 특수고용노동자와 원청의 직접교섭제도 활성화 - 산별교섭 법제화를 통한 사회적 임금체계 확립 <p>□ 플랫폼 및 초단시간 N잡러 소득보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시장 계약형태 다원화를 반영한 ‘일하는 사람 기본법’ 제정. 최저소득 보장 등 명문화 - 재능마켓 등에서 일하는 플랫폼 프리랜서, 지역배당대행업 등 일자리 중계거래 수수료 5% 상하제 - 초단시간 노동자 주휴 등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통해 주 15시간 이상으로 유도 <p>□ 노동시간 획기적 단축, 돌봄시간 보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하는 생애 전체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및 전일제 복귀 청구권 부여. 일과 돌봄시간 자유선택제 도입 / 돌봄휴직 연간 90일 중 30일 유급화 - 주4일제 및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- 심야노동의 단계적 폐지 			

□ 노동자 고용보장, 정의로운 전환

-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특별법 제정,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신재생에너지 등 신규 에너지 사업으로 우선재고용 명문화/ 원거리 고용시 5년간 주거, 교통비용 지원
- 우선재고용 어려운 경우 전환수당 지급. 지역공동화 막기 위해 발전소 폐쇄시 지역경제영향평가 실시. 영향받는 자영업자 등에게도 전환수당 지급
- 노정교섭 활성화

□ 최저임금 정상화, 노동시장 약자보호

- 최저임금 산입범위 원상회복. 장애인, 수습기간 최저임금 전면적용. 최저임금 연대책임 프랜차이즈 대기업까지 확대
-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. 2024년까지 해고의 제한, 연차휴가, 유급공휴일,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적용/2027년까지 전체 적용
- 초단시간 계약금지(갱신기대권 법제화)

□ 직업훈련제도 개편

- 현행 공급자 중심의 직업훈련제도(내일배움카드)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
- 19세 이상 은퇴 전까지 연간 120만원/총 1,000만원 한도 개인직업훈련계좌 제공

○ 이행기간

- 22대 국회 임기 내

○ 재원조달방안 등

- 일반회계, 고용보험, 기금설치 및 기존사업 변경

선거명	제22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녹색정의당		
정책번호 5	<성평등> 성별임금격차 해소, 성폭력 처벌 강화로 거침없이 성평등 사회	분야	여성
<p>○ 목 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여성의 기본권 보호, 성차별·폭력 없는 성평등 대한민국 실현 <p>○ 이행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, 강력한 성평등 추진체계 구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평등한 관점에서의 헌법 개정. 헌법에 남녀동등권의 명문화 -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 전환, 정부 지지체의 성주류화 정책의 전담 추진 기능 강화 - 성별영향분석 평가 업무 전담 인력 확보 및 모든 부처 및 기관에 성평등 담당관 채용 - 동수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 마련, 정당명부 비례제 확대를 통해 여성의 대표성 강화 -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로 공공부문 고위직 여성 확대 및 민간기업의 관리직 여성할당제 도입 □ 차별없는 성평등 일터,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,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,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 페널티 강화 - 채용 성차별 기업 벌칙 강화, 성평등 담당관 선출, 성차별 의심기관 불시 감독 제재 강화 - 직장내 괴롭힘에 성차별적 괴롭힘을 포괄하여 피해자 구제, 직장내 성폭력의 사용자 벌칙 조항 확대, 이차피해방지법 마련, 피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- 부처 협업 통한 고용단절여성 맞춤형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□ 성평등 돌봄, 일·생활 균형 실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돌봄휴가 확대, 출산전후휴가(현행 90일 → 120일), 배우자 출산휴가제 기간 확대(현행 10일 → 30일),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, 육아휴직 3개월 할당, 유연한 육아근로시간 단축제·분할 확대 - 직장 복귀 후 지원하는 사후지급금 25% 규정 폐지,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(상한 인상) - 중소기업 등 대체인력 지원 위한 <대체인력지원센터> 설립·운영, '대체인력' 소득 보장 - 육아휴직 등 법 준수 여부 감독 강화 및 위반, 반복시 가중처벌 등 관련 법 감독 강화 - 특수고용, 플랫폼, 자영업자 등 육아휴직 대상 확대,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 회계 부담비율 확대로 국가 책임 강화 			

□ **젠더 폭력 법제도 전면 정비, 여성 안전 사회 구축**

- 비동의 강간죄 도입부터 젠더폭력 관련 법제 전면 제·개정(성적괴롭힘도 성폭력으로 포괄, 스토킹 교제폭력 규제 강화,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전면개정, 성착취·성매매·인신매매 근절 위한 법률 등 제·개정)
- 성폭력 범죄 처벌 규정 및 수사 지침 재정비, 피해자 인권에 기반한 안전망 마련
- 디지털 성차별·성폭력 대응 강화(적극적 국제공조 체제 마련, 수사기관부터 불법 촬영물 신속 삭제, 디지털성범죄 삭제전담반 확대,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종합서비스지원 확대)
-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성매매 성산업 확산 방지(온라인 그루밍 현장점검 강화, 디지털기술 제공자 강력처벌, 채팅앱 규제 등)
- 소형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범죄예방환경 설계시설 신설 시 보조금 지원 및 세제 혜택 부여, 최저 주거기준에 '안전 기준' 포함, 여성 홍보법서비스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, 위기 상황시 즉시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

□ **여성건강과 성·재생산 권리 보장**

- 임신중단 상담 서비스 표준화, 피임·임신·출산에 대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, 의료기관 접근성 보장
- 임신중단 약물 도입을 통한 선택권 확대, 임신중단 시술 방법과 지침 마련, 응급 피임을 포함한 피임 건강보험 적용, 비용 장벽 제거
-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원, 안전한 월경권 보장, 건강정책 우선순위 및 예산배분에 대한 성인 지적 관점 적용, 여성 건강 종합프로그램 구축 및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
- 여성의 몸과 성을 상품화 하는 여성인권 침해성 광고 및 방송 규제 등 몸 다양성 보장
- 성적 동의 및 성적 의사소통 등 성적 권리에 대한 생애 전반에서의 정보 제공과 교육

□ **한부모 가족, 이주여성 등 맞춤형 지원 강화, 모두의 기본권 보장**

- '건강가정' 용어를 삭제하는 건강가정 기본법 전면 개정,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 확대
- 한부모 임신·출산·산후조리·육아·구직 종합지원체계 마련, 양육비 이행 강제 강화, 대지급제 개선
- 장애 여성 자립생활 기반 마련, 장애여성의 모성권과 건강권 보장 등 의료체계 확립
- 폭력·인신매매·성매매 피해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수용,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,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·취업 교육 지원 강화, 취업이주 여성의 노동권 보장,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 등

○ **이행기간** : 22대 국회 임기중

○ **재원조달방안 등** : 법·제도 개선 사항, 일반회계 등으로 조달

선거명	제22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녹색정의당		
정책번호 6	<지역소멸, 민생> 지방대무상교육, 부채탕감으로 지역소멸-민생위기 대응	분야	행정자치, 재정경제
<p>○ 목 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방대부터 무상교육, 지역의료 공공성 확보로 지역인구유출 방지 - 지역순환경제 5법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촉진 - 지자체 재원이전,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, 부 유출 방지 -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100조 탕감 <p>○ 이행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지방대부터 무상교육, 지역의료 공공성 확보로 지역인구유출 방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방대부터 무상교육,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 공공병원 설립 등 지역 공공의료 강화, 2028년 30만원, 2030년 50만원 농어민 기본소득 통한 청년, 노인 등 지역 인구유출 방지 □ 지역순환경제 5법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촉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‘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’‘한국형 지역재투자 및 지역재투자 평가법’제정, ‘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’, ‘조달사업법’개정, ‘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’ 개정해 지역공공은행 설립, 지역사랑상품권 2차사용 확대,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□ 지자체 재원이전,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, 부 유출 방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방교부세율 내국세의 22%까지 상향해 재정분권 강화 -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, 지역상생발전기금 통합해 ‘지역균형발전교부금’ 설치·운영 하고 배분내역 및 성과분석 공개 -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, 근로소득, 법인사업소득의 납세지를 발생지로 변경하는 ‘지방세법’ 개정 			

□ 「긴급금융회생기금」 30조 원을 기반으로 채무조정 대상 부채 100조 원 매입

- 금융기관 출연금 15조 + 정부 국채 발행을 통한 출연금 15조로 30조 조성
- 채무조정 대상: (1단계) 코로나19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
(2단계) 제2금융권·대부업체 이용 다중채무자, 채무상환비율 고위험군 차주

□ 「한계 소상공인·자영업자」 추가 지원과 현행 채무조정 제도개선

- 3개월 이상 연체, 협약채권회사에 대부회사 제외 등 까다로운 신청조건 완화
- 한계 상황 몰린 차주 원금이자 감면 및 10년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
- 대환대출 자격 기준 금리 7% 이상에서 중저금리로 인하
- 채무자 맞춤형 워크아웃을 도입하고, 패스트트랙 제도 활성화

□ 「부채탕감 통합조정기구」 설치

- 정부(중기청, 금융위 등), 소상공인, 금융 전문가, 시민사회, 정당 등으로 구성
- 저소득 소상공인 부채탕감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시행관리, 재생 프로그램 개발

□ 폐업 및 파산재생 지원 프로그램 도입

- 대출자 폐업 시 일시상환 중단유예, 노동 시장 편입 프로그램 참여 강화
- 전국 지자체 채무조정 담당 부서 신설 및 회생전문법원 추가신설
- 노동시장 편입이 어려운 경우, 재창업 전환프로그램 참여 지원

□ 서민정책금융 확대

- 빈곤층을 위해서 2천만 원 한도에서 압류금지 통장 개설(행복지킴이 통장)
- 파산절차에 중지명령제 도입
- 파산 후 당면 면책, 파산 후 당면복권 기간 5년으로 단축, 조세도 면책대상 채권에 포함
- 약탈적인 대출 관행 규제
-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

○ 이행기간

- 22대 국회 내, 농어민 기본소득은 22대 국회 내 입법완료

○ 재원조달방안 등

- (지역소멸) 국고, 일반회계, 기금설치 및 기존사업 변경
- (부채탕감) 금융회사 출연금, 국채 발행 등으로 기금 조성

선거명	제22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녹색정의당		
정책번호 7	<이주민, 장애인, 성소수자, 청년, 청소년> 다시, 차별금지법, 이주사회기본법, 탈시설로 모두가 공존하는 인권 사회	분야	행정자치, 보건복지, 사법윤리, 노동, 재정경제
<p>○ 목 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존을 위한 이주사회 기반구축 - 탈시설, 이동권, 노동권으로 장애인 권리보장 - 성소수자 인권 선진국 실현 - 청년, 청소년이 내일을 상상할 수 있는 사회 <p>○ 이행방법</p> <p>□ 공존을 위한 이주사회 기반구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주배경시민청(이민청) 설치, 이민사회기본법 제정 - 노동비자유주제도 도입과 인권친화적 고용허가제 - 인권을 존중하는 난민법 개정 -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의 인권 증진 - 문화 다양성 증진 -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보장 <p>□ 장애인 권리 보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친환경 저상버스 100% 도입과 무장애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 - 장애인콜택시 2배 확대 및 지지체 직접 운영 - 탈시설 및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-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, 장애유형·성별에 따른 장애인정책 마련 - 발달·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보장, 활동지원서비스 중증장애인 2인 1조제 도입, 신체활동보조 추가 가산금 인상, 활동지원사 월급제 도입 -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,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,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 -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동료지원센터 설치, 보호의무자에 의한 사실상의 강제 입원 제도 폐지 등 정신장애인 탈시설·탈원화와 인권 기반 지역사회 실현 - 농학교 수어교육 및 교사 수어자격증 의무화, 지상파 및 종편, 영화관, 공연장 화면해설 확대 및 지원 등 시청각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 			

□ 성소수자 인권 선진국 실현

- 차별금지법 제정
- 다양한 가족 구성을 위한 동성혼과 생활동반자관계 제도화
- HIV 감염인 인권보호
- 성별 변경 성소수자 인권보호
- 공공기관 인권교육 및 국가인권위원회 강화

□ 함께 사는 사회, 함께 사는 청소년

- 학생인권법 제정, 인권·노동·민주시민·경제·성·환경 교육 활성화 등 청소년 인권 보장
- 청소년 승차권 발급, 버스·고속열차 고속버스비 지원 등 아동·청소년 대중교통 무상화
- 노동인권조사 정기 실시, 지자체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, 특성화고 현장실습 안전 강화
- 선거권 16세로 연령 하향,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등 청소년 정치참여 확대
- 청소년부부 지원 확대, '모두를 위한 화장실' 확대 등 소수자 청소년도 함께 사는 사회
- 청소년 쉼터 확대, 꿈드림센터 예산 확대 등 학교 밖, 탈가정 청소년의 인권 보장

□ 청년, 내일을 상상할 수 있는 나라

- 청년 부채 해결. 중위소득 100% 이하 학자금 대출 전액 탕감 및 구간별 대상 확대 검토, 소득 상관 없이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, 청년신용회복기금 조성, 청년 맞춤형 금융복지상담 센터 전국 설치
- 월 20만 원 청년 주거수당 지급(최대 3년), 지방대부터 무상기숙사 실시,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기준과 지원 한도 상향, 청년 1인 가구 맞춤형 사회주택 공급 확대
-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20대 청년에게 연 10만 원 문화이용권 지급
- 청년의회 설치 및 시범 운영, 지자체별 청년자율예산제 실시 의무화

○ 이행기간

- 22대 국회 임기 내

○ 재원조달방안 등

- 법·제도 개선 사항, 일반회계 등으로 조달

선거명	제22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녹색정의당		
정책번호 8	<생태,농어업,먹거리> 사람과 농어업, 동물, 자연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	분 야	농림해양수산, 산업자원
<p>○ 목 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생태계 복원 국가책임, 생태학살범죄 처벌 강화 - 기후위기 대응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농어업 먹거리 - 동물권 보장과 동물 공존 사회 <p>○ 이행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그린벨트 해제 반대 및 보전, 자연복원 법제화 - 2030년까지 육상 및 해상 보호 지역 각각 30% 이상 확대 추진 - 난개발 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□ 플라스틱 생산·소비 감축 및 공공기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모든 공공기관 및 매장의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과 종이컵 사용 금지 - 공공기관, 공공장소에 식수대 회복, 설치 확대 - 국내 석유화학업계 화석연료 사용 규제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(EPR) 강화 □ 후쿠시마 원전 폐수 해양 투기 금지를 위한 국제법상 요구 및 모니터링 실시 □ 자연의 권리 법률 제도와 환경범죄 및 생태학살(Ecocide) 처벌·예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주남방큰돌고래 등 비인간 존재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 - ‘생태학살 처벌 특별법’ 제정 및 로마규정 개정을 통한 에코사이드 처벌 찬성 - ‘환경범죄 합동수사단’ 확대·개편 및 환경범죄 관련 총리실 산하 범부처 TF 신설 - 새만금(수라갯벌), 가덕도와 제주 신공항, 설악산 케이블카 등 생태학살에 준하는 개발 사업 중단 및 재야생화하며, 4대강 복원 - 환경공익소송, 환경범죄소송에서 자연의 대리인 참여 보장 			

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농어업먹거리

- 기후생태직불금, 농작물재해보상제도로 기후위기 대응
- 220만 농어민기본소득으로 소득안정화, 1인당 월 30만 원 지급만원 확대
- 농지확보, 식량자급률 60% 달성, 먹거리기본권과 농민권리 보장하는 식량주권법 제정
- 친환경쌀 100% 생산으로 친환경농업 50% 달성
- 190만 지방대학 학생들부터 대학생 ‘반값 밥상’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
- 직거래 공공도매시장으로 농민, 소비자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 보장
- 산재보험 받는 농어민, 산업폐기물 없는 농어촌
- 농어업 예산 비율 6%, 기후생태정책실 및 여성농민정책관 신설

□ 동물권을 보장하고, 동물들과 공존하는 첫걸음

- 동물 번식업의 금지 및 새로운 동물등록제 도입
- 자치구별 동물종합돌봄센터 및 동물보건소 설치
- 동물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제·개정, 동물청 신설
- 야생동물 살해 방지와 삶터 존중 정책 실시
-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 축제 폐지와 동물학대 예방
-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, ‘동물실험 폐지 및 대체시험법 지원에 관한 법률’ 제정
- 학교에서의 동물실험 금지 및 민관협력기금 조성하여 대체 실험 기술 활성화

○ 이행기간

- 22대 국회 임기 내

○ 재원조달방안 등

- 법·제도 개선사항, 일반회계 등으로 조달

선거명	제22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녹색정의당		
정책번호 9	<주거> 영끌 시대 끝내고 시작하는 녹색공공주거 시대	분야	건설교통
<p>○ 목 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가구 3주택 보유 금지,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- 종합부동산세, 개발이익환수제 강화로 녹색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보 - 기후재난에 안전한 그린리모델링 실시 -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, 깡통주택 공공임대 전환 <p>○ 이행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1가구 3주택 보유 금지,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도권에서부터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 금지 법제화. 세 번째 주택부터 국가수용 실시하여 10년 이내에 공공임대주택 물량 100만 호 이상 확보 - 공공주택에 단열공사, 재생에너지 냉난방 시스템 시공 등을 포함한 ‘그린리모델링’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시키고, 대규모 건설 사업 없이 10년 내에 무주택 서민들에게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 호를 저렴하게 공급 □ 종합부동산세, 개발이익환수제 강화로 녹색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주택자에 대해 기본공제 폐지 및 특례조항 축소하여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 평균 3% 수준으로 강화하고 1.2~6% 누진적 중과세 실시 - 모든 부동산 개발 사업에 누진적 개발이익환수제 전면 실시하고, 개발이익 최대 80%까지 환수 - 종합부동산세와 개발이익환수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여, 10년 이내에 녹색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예산 300조원 확보 			

□ 기후재난에 안전한 그린리모델링 실시

- 공공부문부터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실시해 탄소배출 감축과 주거 안전 확보
- 주거기본법상 최저주거기준을 1인 기준 10평, 1.5룸 기준으로 상향하고, 적정온습도 및 적정 크기 창문 규정 등을 추가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은 임대 금지
- 건물주의 그린리모델링에 대해 임대료 5년 동결 조건부로 리모델링 비용 지원
-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과 옥탑방, 고시원, 반지하, 비닐하우스 등 비적정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이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공공임대주택에 즉시 입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

□ 저소득층 세입자 주거 임차료 지원, 임대료 인상 제한 강화

- 월 주거 임차료가 월 소득의 30%를 초과하는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30만 원 한도 내에서 월 소득의 30% 초과분에 해당하는 임차료 지원
- 임대료 5% 인상 제한을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여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임대차보호법 개정

□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, 깡통주택 공공임대 전환

-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, 정부 재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 구제 후 건물주에 대한 구상권 행사
- 구상권 행사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해당 건물 몰수하여 단계적으로 그린리모델링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
- 이른바 깡통주택 전수 조사 후 적합한 건물에 대해 공공선매를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그린리모델링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

○ 이행기간

- 22대 국회 임기 내

○ 재원조달방안 등

- 법·제도 개선 등으로 추가 세수 확보

선거명	제22대 국회의원선거		
정당명	녹색정의당		
정책번호 10	<개헌,사법,언론,남북,외교> 개헌을 통한 강한 시민공유민주주의 실현	분야	정치, 행정자치, 사법윤리, 통일, 외교 과학기술정보통신
<p>○ 목 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헌을 통한 대의민주주의와 시민공유민주주의를 융합하여 강한 국민주권 시대 실현 <p>○ 이행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제7시민공화국을 여는 개헌,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융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를 융합하는 제7시민공화국 개헌 - 국민이 개헌, 법률안 제정과 개정의 최고 입법권자가 되는 국민법안발의권 도입 - 국가의 중요 정책 및 조약의 체결·비준, 대통령 및 국회의 의결, 부결, 재의 법률안에 대한 최종적으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국민투표발의권 도입 - 국민이 대통령, 국회의원에 대해 정치적으로 소환할 권리를 가지는 국민소환권 도입 - 범국민참여예산협의회를 신설하여 예산에 국민이 개입할 수 있는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□ 제7시민공화국 정치개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회가 국무총리를 결정하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- 대통령 비서실 축소, 내각 중심 정부 운영 - 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- 2인 이상 시민이 모이면 누구나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정당 설립 자유화, 지역정당 허용 - 100% 연동형비례대표제, 완전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 - 교섭단체 5~10석 요건 완화로 국회운영 다원화, 민주화 □ 법 앞의 평등, 사법정의 실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정년제 도입과 법원민주화,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다양성 보장 - 국가수사체계 개편 완성 - 민주적 군사법제도 실현과 군인권리 보호 -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비리 척결 - 피의사실 공표 제한적 허용 등 인권존중 수사과정 정착 - 재벌 총수 사면, 황제노역, 유전무죄 특혜 근절 			

□ **국회의원 기득권 타파로 정치신뢰 회복부터**

- 국회의원 세비 및 고위공직자 급여 최저임금 3배 연동
- 개헌 및 국회법 개정을 통한 국회의원의 면책 및 불체포 특권 제한
- 국회의원, 고위공직자 현금, 1주택 제외 전 재산 백지신탁 의무화, 직계가족 재산변동 신고 의무화
- 선거법 등 국회의원 신상에 관한 결정은 모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평의원 제도 결정
- 국회 윤리위 구성에서 국회의원을 배제하여 실질적인 국회의원들의 부패와 비리 엄단
- 국회의원이 회기 중 결근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급여 삭감
- 국회의원 후원회 추가 모금은 총선에만 한정,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 추가 모금 금지

□ **언론의 독립성, 미디어의 공공성 강화**

- 방송보도 심의 전면 폐지, '언론 자율규제기구' 통한 자율규제 전환
- 공영방송 이사 국민이 추천, 공영방송 사장 및 보도·제작·편성 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
- 미디어 정책기구 재구성과 통합 미디어법 제정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로 '미디어개혁위원회' 설치
- 방송산업, 출판산업에 만연한 '무늬만 프리랜서' 관행 근절,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지속 확대, 고용보험·산재보험 적용으로 미디어 노동자 노동권 강화
-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미디어바우처 도입, 언론진흥기금 등 활용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 확대
- '마을공동체미디어 기본법' 제정, 기초자치단체마다 '마을공동체미디어지원센터' 설립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 진흥

□ **녹색 평화를 위한 한반도-동아시아-세계의 다차원 협력, 남북평화공생**

- 전쟁 방지-기후협력을 위한 '녹색 평화 6지회담' 추진
- 평화·공생·기후협력 '국제기후평화연대회의'와 '진보정당 인터내셔널' 추진
- 남북기본협정 체결로 평화 공존 제도화
- 군비증강 등 남북 군사적 대결 정책 중지-상호군축 선도
- 서해 평화수역 조성 및 재생에너지·생태 협력 추진

○ **이행기간** : 22대 국회 임기 내

○ **재원조달방안** 등 : 법 제도 개선 사항, 일반회계 등